

조선과 한국: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

김명섭 |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1897년 대한제국 수립 당시부터 한일강제병합기를 거쳐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분립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를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1897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강박한 일본은 한국이라는 국호 대신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계기로 한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해외광복운동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공산주의계열은 한국보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이러한 개념적 분화는 1948년 수립된 사실상 두 개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한국)의 정체성에 투영되어 재생산되어오고 있다.

주제어: 한국, 조선, 코리아, 민족관념, 지정학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과 '한국'이라는 관념의 지정학적 연속과 분화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 조선과 한국의 관념적 차이와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 문제제기는 '새한'이라는 대안적 국호를 제안했던 설의식에 의해 개진되었다(설의식 n.d).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선행연구들로는 임대식(1993), 김혜수(1997), 윤병석(2011), 이

*이 연구는 2014~2015년 연세대-서울대 협력연구 프로젝트(통일의 신지정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프로젝트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김석원(연세대 박사과정, 하바드대 엔칭연구소 방문연구원)과 김정민(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등이 자료수집과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었다.

선민(2013), 황태연(2015) 등의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변천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1897년 대한제국 수립 당시부터 한일강제병합기를 거쳐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한국’이라는 명칭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의 연속과 분화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정치적으로 반복되는 명칭의 재생산과 민족관념 간의 상관성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말했던 시니피앙(signifiant: 기표)과 시니피에(signifié: 기의)의 관계와도 같다. 시니피앙(기표, signifiant)은 기호의 겉모습, 즉 음성(音聲)으로 표현된 모습을 의미한다. 시니피에(기의, signifié)는 기호 안에 담긴 의미를 말한다. 즉 ‘파이프’라는 단어의 철자와 [paipu]라는 발음은 시니피앙이고, 담배를 피울 때 쓰는 도구로서의 파이프라는 구체적 대상은 시니피에이다(Saussure 1986, 97-103). 조선과 한국이라는 호명은 시니피앙이고 그러한 호명 안에 담겨지는 내용은 시니피에이다. 소쉬르는 시니피앙에 의해 전달되는 시니피에가 시니피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니피앙에 의해 시니피에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설사 원형적 민족이 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호명이 오랜 시간을 통해 재생산됨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관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지정학은 고전적 지정학 보다는 비판적 지정학의 의미에 가깝다. 공간(영토)에 중점을 둔 고전적 지정학과 달리 비판적 지정학에서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상관성에 주목한다(Flint 2007; Chauprade 2003). 이 연구 또한 단순히 ‘조선’과 ‘한국’이라는 지명의 변화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칭의 변천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 즉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지니는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이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호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부르는 호칭도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서동만 2005, 52). ‘북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병용한 저작도 출판된 바 있다(김학준 2008).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조선과 한국이라는 장기지속적 관념의 연속성과 차이를 비판지정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조선에서 한국(대한제국)으로의 변천과 연속성

1897년 10월 12일 조선의 26대 왕 고종(高宗)은 ‘칭제(稱帝)’를 선언하며 ‘대한국(大韓國)’이라는 국호를 선포했다. 이후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병합까지의 시간은 13년에 불과했지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은 웨스트팔리아적 원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첫째,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변화는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소개된 웨스트팔리아적 원리에 적응한 결과였다. 1648년 유럽에서 종교전쟁의 광기를 봉인하면서 수립된 웨스트팔리아국제체제는 근대적 국제(國際, international)의 시발점이었다. 프랑스 종교전쟁, 신교도들에 의한 네덜란드 건국전쟁(1568-1648), 그리고 30년 종교전쟁(1618-1648)을 봉인한 웨스트팔리아평화체제의 기본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왕은 자신의 영내에서 황제다(rex est imperator in regno suo). (2) 한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cujus regio, ejus religio). 이러한 웨스트팔리아원리는 최고성과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주권에 기초한 국제체제를 형성했다(김명섭 2015; Kim 2014).

근대의 세계사는 제국주의적 팽창의 역사였던 동시에 웨스트팔리아적 의미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역사였다. 이러한 ‘제국’과 ‘국제’의 나선형적 확대가 지속되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역사적 흐름이 생성되었다. 하나는 제국들이 꾸준히 ‘분열’되는 역사적 흐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약 2백개에 달할 정도로 독립국들이 증대되어온 역사적 흐름이다.

고종의 칭제는 청(淸)에 대한 독립을 보여주기 위해 독립문을 건설한 독립협회(獨立協會)의 비판적 지지 속에 이루어졌다. 흥정(欽定)헌법으로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1조에 따르면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 바자주독립해온 제국”임을 밝히고 있다.¹⁾ 이처럼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공인을 받았음을 강조한 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웨스트팔리아적 국제원리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조선이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헝

1) 『고종실록』(1899기해/대한 광무 3년/8월 17일 2번째 기사).

가리 등과 체결한 근대적 국제관계들은 보전되었고, 벨기에(1901), 덴마크(1902) 등과의 국제관계는 새롭게 수립되었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국제우편연합(UPU, Union postale universelle)에 가입했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Korea, Rep.)의 국제우편연합 가입일(date of entry)은 1900년 1월 1일로 인정되고 있다(김명섭 2011b). 대한제국이 제네바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된 것은 1903년 11월 8일로서 청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한 1904년 6월 29일이나, 독일이 동 협약에 가입한 1906년 6월 12일보다 빨랐다(김명기 2008, v). 이러한 국제적 지향성은 1907년 광무황제의 강제퇴위로 이어진 헤이그특사파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었다.

둘째, 대외적으로 주권국가임을 선언하고 국제적 지향성을 가졌던 것만큼 중요했던 특성은 ‘한국(韓國)’이라는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한국민(韓國民)’이라는 국민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비록 ‘전제’를 선언했지만, 대한제국에는 전제정과 함께 애국적 가치에 근거한 비판적 민간여론의 장이 공존했다. 독립협회의 공식적 정치활동은 1898년 강제해산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독립협회가 선도했던 여론 자체는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그리고 일본 동경에 유학한 학생들의 모임이었던 대한흥학회 회보였던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등에는 전제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국권에 도움이 될 수 없고 “입헌(立憲)은 문명부강의 주물(主物)이고, 문명부강은 입헌의 종물(從物)”이라는 인식을 담은 논설들이 게재되었다(김진성 1909).²⁾ 1907년 안창호(安昌浩), 양기탁(梁起鐸) 등에 의해 창설된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가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에서 더 나아가 공화정체(共和政體)를 지향하며, “우리의 생사 버리지 못하는 대한”을 위해 “국민을 유신(維新)”시켜, “자유문명국”을 만들 것을 천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이었다.³⁾

황제만의 한국이 아닌 국민의 역할이 인정되는 한국이 인식되고 그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대한,’ ‘한국,’ ‘한’의 명칭을 사용한 언론매체들의 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 신문은 영국인 베델(Thomas Bethell)이 1904년 7월에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였다. 이 신문은 국한문판, 국문판, 영문판 등으로 발행되었다. 1906년 3월 장지연(張志淵), 윤치호(尹致昊), 남궁훈(南宮薰) 등이 대한

2) 조소앙(趙素昂)은 『대한흥학보』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3) “대한신민회 취지서 및 동회 통용장정 등 보고 건,” 『통감부문서』 6권.

자강회(大韓自強會)를 창설했고, 이들은 『대한자강회월보』를 발간했다. 대한자강회가 1907년 8월 일제의 통감부에 의해 해산되자 자강회의 중심인물들은 다시 대한협회(大韓協會)를 결성했다. 이들은 1909년 6월부터 『대한협회회보』를 발행했고, 이것을 다시 일간지로 변경한 『대한민보(大韓民報)』를 발행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베텔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 특별히 일제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고, 국채보상운동 같은 거국적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1908년 5월 기준으로 이 신문은 국한문판이 8,143부, 국문판이 4,650부, 영문판이 463부 발행되었고, 국내외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선민 2013, 116). 『대한매일신보』의 영문판 제호는 *The Korea Daily News*였다. 전통시대로부터 지칭되었던 ‘코리아’가 대한 또는 한국으로 대응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의 1907년 1월 6일자 한문판과 1909년 5월 30일자 국한문혼용판에서는 ‘대한민국’이 사용된 용례도 발견되었다(황태연 2015, 69-70).

미주이민사회에서 발행된 신문 역시 조선 대신 한국, 조선인 대신 한국인이라는 용어를 유통시키는 데 기여했다.⁴⁾ 하와이에서는 1907년 『한인합성신보(韓人合成新報)』가 발간되었는데, 이 신문은 1909년 『신한국보(新韓國報)』로 개칭되었다가 1913년 8월에는 『국민보(國民報)』가 되었다. 하와이의 한민합성협회(韓民合成協會), 캘리포니아의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및 공립협회(共立協會)가 설립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가 1909년 2월부터 발간한 한글전용 신문은 『신한민보(新韓民報)』였고, 영문 제호는 *The New Korea*였다. 이완용(李完用) 등이 1907년 7월에서 1908년 6월까지 발행했던 신문 역시 『대한신문(大韓新聞)』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문들을 통해서 조선 대신 한국, 조선인 대신 한국인이라는 용어와 정체성이 대한제국 시기 국내외에서 확산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9년 5월 5일의 논설을 통해 베텔이 “한국에 멀리 와서 한국동포의 고통하는 것을 슬피 여기며 한국동포의 성명을 보호하기를 도모하여 밥먹기는 잊을지언정 한국동포는 감히 잊지 못하여 그 슬퍼함과 기뻐함과 슬퍼함과 즐거움과 그 우려와 사상과 동정이 우리 한국동포를” 위하였고, 그가 임종 시에 “나는 죽지만 신보는 영원히 살게 해서 한국(韓國)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대한매일신보 1909/5/5). 9일자 신문에 게재

4) 대한제국 시기에는 유민원(綏民院)이 설치되었고, 여권에 해당하는 집조(執照)가 발행되어 본격적인 미주이민이 시작되었다.

된 추모사에서는 베델이 “한국을 위하여 정정방방한 언론으로 붓을 높이 들어” 활동했고, 그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해서 “하늘이 한국의 운명을 돕고져 아니하심”인가, “한국사람의 실력을 스스로 배양코자 하심인가”라고 기록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명칭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⁵⁾ 1897년에서 1910년까지 한국이라는 관념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과도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웨스트팔리아 주권국가의 모델에 적용한 독립국이 선포되었고, ‘문명개화(文明開化)’의 논리에 따른 애국계몽운동이 ‘허용’되면서, 집권층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흐름과 새로운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국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⁶⁾ 1897년 제국들의 팽창과 국제사회의 팽창이 중첩되는 가운데 ‘조선(朝鮮)’을 대신해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지정학적 관념이 발전했다.

1910년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병합에 즈음하여 “한국의 국호는 개(改)하여 이금(爾今) 조선이라 칭함”이라는 일본천황의 칙령과 함께 조선총독부 설치를 공포했다.⁷⁾ 일제는 대한제국의 명칭을 ‘남해도’(南海道)로 할 것도 고려했지만, 결국 대한제국에 의해 부정된 ‘조선’이라는 명칭을 되살렸다.⁸⁾ 이러한 명칭은 청제국 하의 ‘조선’에서 일본제국 하의 ‘조선’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정치적 선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강제 매수되어 ‘대한’이라는 칭호가 탈락된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가 되었고, 『대한민보』는 제호를 『민보(民報)』로 고쳤음에도 폐간되었다. 친일신문인 『대한신문』도 『매일신보』에 흡수

5) “대한매일신보 전사장 배설씨를 조상함,”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9일.

6) 각기 강조점은 다르지만 최소한 대한제국기 정치공동체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슈미드(Schmid 2002), 백동현(2009), 김소영(2009) 등을 참고. 당시 ‘공론장의 형성’에 주목한 연구들로는 송호근(2012; 2013) 등을 참고. 인민주권의 논리와 민족주의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은 야크(Yack 2012)를 참고. 조선학과 한국학을 구별해보고자 하는 시도로는 임상석(2010)을 참고.

7) “일본천황의 합병조서, 한국황제 및 황실에 대한 칭호, 한국국호에 대한 칭호 등,”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1』.

8) 국칭변경은 병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1910년 일본내각에서 결정된 『한국병합시 처리법안대요』의 1번 ‘國稱의 作’에 포함되었다. 이후 대일본제국 명칭 43년 8월 29일 칙령 제 318호에서 “한국의 국호는 개하여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라고 했다(윤대원 2011, 82-3; 윤병석 2011, 25, 135).

되었다.⁹⁾ 1910년 이후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어 신문으로 서울의 『조선신문(朝鮮新聞)』, 대구의 『조선민보(朝鮮民報)』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한국’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한국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적 정체성까지 제거할 수는 없었다. 북벽론(復辟論)적 의미의 광복운동이 공화제를 지향하는 광복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던 1917년 7월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박용만(朴容萬), 윤세복(尹世復), 조소앙(趙素昂), 신석우(申錫雨) 등은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한국인에게 주권을 양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들어,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무시(無始) 이래로 한국인의 한(韓)”이라고 밝혔다.¹⁰⁾ 1918년 김규식(金奎植), 여운형(呂運亨), 김철(金澈)이 결성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은 “대한독립, 사회개조, 세계대동”을 당강(黨綱)으로 내세웠다.¹¹⁾ 대한제국 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은 1920년대의 ‘문화적 민족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Robinson 1988, 19-37). 문화적 민족주의를 통해 조선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이 강조되었다.

III. 3·1운동 이후의 한국(대한민국 임시정부)과 조선

1919년 3·1운동에서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조선’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1919년 4월 11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하고, 3조부터 6조까지 ‘대한민국’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했다. 8조에서는 대한제국 “구황실”에 대한 우대방침이 천

9) 『매일신보』는 제호에서 “대한”을 삭제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한의 국호를 조선이라 개칭한 후에는 대한으로 그제 두는 것이 사세에 그릇치 아니함으로 본보 명호 대한 이자(二字)를 제하여 업새노라.” “본보명 개명” (매일신보 1910/8/30).

10) “대동단결선언 원문(1917. 7),” 『국외항일운동자료 일본외무성기록』, “3·1운동 이후 ‘대한제국명명정부’가 거의 거론되지 않고, 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국내외 독립운동 진영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박찬승 2013, 126-27).

11) “신한청년당 제1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권 임정편 III』.

명되었다. 현장과 함께 발표된 선서문에서는 “이천만 동포국민”이 “민국원년”에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다고 언명함으로써 한국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앞서 존재했음을 선언하고 있다.¹²⁾ 1919년 9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이라고 밝혔다.¹³⁾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의 대상으로 특정했던 것은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았던 주권이었다. 다만 그 주권의 국내적 성격은 더 이상 군주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이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관념이 널리 전파되었다. 특히, 1921년부터 1929년 사이 ‘한’ 또는 ‘대한’이 사용된 신문들이 속출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미보(韓美報)』, 『한인교회보(韓人教會報)』, 『한인기독교보(韓人基督教報)』,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신한민보』가 발행되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대한(新大韓)』, 『대한독립보(大韓獨立報)』, 『대한임시정부공보(大韓臨時政府公報)』가 발행되었다. 만주에서도 『신한공보(新韓公報)』, 『민한(民韓)』, 『신한청년(新韓青年)』 등이 발행되었다(차배근 외 2001, 127-128).

프랑스가 일찍이 제국주의적 방법으로 상해에 설치했었던 조계(法租界, 파주제, French Concession)의 공간을 활용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전후처리의 원리로 제시된 윌슨(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걸었다.¹⁴⁾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서 김규식과 함께 전개했던 광복외교의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1882) 제1조에 명시된 필수상조(必須相助) 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고정휴 2004, 318-47). 웨스트팔리아적 국제질서를 긍정하고 공화제를 지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체성은 제국주의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천명했던 윌슨주의와 친화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 베르사유체제(1919)와 워싱턴체제(1922)가 일본의 제국질서를 온존시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선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혁명정부를 전복하고 볼셰비키가 집권하면서 1919년 새로운 국제적 대안으로 제시된 공산주의 국제연대(코민테른, Communist International)는 유

12)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13)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헌법·공보』.

14) 윌슨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마넬라(Manela 2007, 26-33).

라시아 전역에서 반제공산주의 진영의 급속한 확대에 이어졌고, 월슨주의와 친화적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노선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1920년대 이후 공산주의 계열에서 ‘한’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임대식 1993, 35-50). 다만 이전에 존재했던 상하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모체인 한인사회당의 경우에는 ‘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한인사회당이 고려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20년 공시된 레닌의 21개 코민테른 가입조건에서 각국의 사회당들로 하여금 코민테른에 가입하려면 공산당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프랑스공산당(PCF)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프랑스 사회당(PS)은 태생적으로 반공좌파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Degras 1956, 168-172; 김명섭 2011a, 8-13).

1921년 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폐와 진로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절정에 달했다. 국민대표회의에 앞서 박용만(朴容晩) 등이 주축이 된 군사통일회의(軍事統一會議)는 통첩문을 통해서 “아(我) 국가의 광복을 비일(卑日)히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히고,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과 상해임시의정원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¹⁵⁾ 대한민국 임정의 진로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지지했던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부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용기가 과하고 대한사람으로서 참아 못할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선을 그었다.¹⁶⁾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과 상하이파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의 창립을 주도했던 이동휘(李東輝)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1921년 10월 16일 볼셰비키 정부의 외무인민위원회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가 “확실하게 친미적 성향”을 띠고 있고, “미국의 지지를 통한 한국의 해방이 곧 한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¹⁷⁾ 이동휘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유라시아대륙에 확산되고 있던 공산주

15) “군사통일회 통첩(1921. 4. 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5: 국민대표회의 I』, 3.

16) “안창호씨의 연설, 독립운동의 진행책과 시국문제의 해결방점(1921. 5.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5: 국민대표회의 I』, 13.

17) “이동휘의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비판과 소비에트 측이 제공한 혁명지원금의 사용내역 보고(1921. 10. 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5: 국민대표회의 I』, 271. 장봉에 따르면 이동휘는 이승만을 다음과 같이 폄하했다. “또 각하는 아직 사회주의의 소양이 무(無)한즉 식견이 미국의 정치제도에 불유(不踰)해야 진정한 평등 자유의 공리(公理)는 불오(不悟)할 듯 하다하며…(후략).” 장봉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20. 8. 21), 유영익·송병기·이명

의를 토대로 임시정부가 주장해 온 ‘공화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재독해한 것이었다. 이동휘는 태평양 방면에서 일본과 함께 워싱턴체제를 구축한 미국을 비판하면서 1917년 러시아에서 집권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다.

1923년 1월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92회에 달하는 회합과 3개월에 거친 토의를 가졌지만,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와 완전한 폐기와 재창조를 주장했던 창조파의 분열로 마감되었다.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으로 인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양분되었다. 1923년 11월 24일 창조파의 김구식과 윤해(尹海)는 국민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소련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파가 내세웠던 주요 주장,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는 단순한 활동상의 실수가 아닌 “조직 업무 및 전반적으로 조직 내 혁명 대중과의 연계장치가 조약”하게 구성된 결과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격렬한 혁명적 봉기”의 시점에 발생한 “일부 대중의 구체적 슬로건”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신을 “혁명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회에 복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¹⁸⁾

김구식 등의 창조파가 주축이 된 국민위원회(國民委員會)는 1925년 소련의 승인을 얻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소련의 무관심으로 실패했다.¹⁹⁾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 창조파 역시 한국이라는 국호는 고수했지만,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인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 초기와는 달랐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거쳐야 할 단계일 뿐 최종적일 수 없는 과도기적 민주주의로 인식되었다. 혁명운동을 위해 “혁명조직”

래·오영섭 편(2009, 244).

18) “국민대표회의서의 ‘개조파’와 ‘창조파’ 분열의 원인과 그 결과(1923. 11. 24),”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5: 국민대표회의 I』, 387.

19) 김구(金九)는 이 사례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회고했다.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는 잡종회라고 부를 만했다. 200여 명의 한인 대표들이 일본·조선·중국·러시아 등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두 공산당은 경쟁적으로 민족주의 대표들을 끌어들었다. 이르쿠츠크파는 현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 정부를 조직하자는 창조를, 상해파는 현정부를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고치자는 개조를 각각 주장하여 결국 회의는 분열되었다. 창조파는 이른바 ‘한국정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그 정부의 외무총장인 김구식이 그것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러시아세 출품했지만, 러시아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계획이 무산되었다(김구 2009, 475-76).”

의 하나로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혁명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²⁰⁾

일손주의에 대한 환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쇠락과 더불어 ‘조선’이 재호명되었다. 특히, 공산주의 단체들은 고려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들이 한국이 아닌 조선을 사용하게 된 경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자’들이 ‘대한(大韓)’이라는 명칭을 선점한 것에 대한 반발, 대한제국의 기억이 없는 세대들의 무관심, 대중지향의 원칙에 따라 널리 통용되고 있던 ‘조선’이라는 용어의 수용 등이 지적된 바 있다(임대식 1993, 39). 이에 덧붙여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 만국노동자의 연대를 추구했던 공산주의의 영향력 확대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주권회복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조선’을 포함한 일본제국 내부로부터의 전복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조선’이 지니는 근대주권적 차이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더구나 일제의 통치 하에 있던 국내에서 ‘한’ 또는 ‘한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았다. 일제의 문화통치 하에서 1920년대 창간된 신문들의 명칭 또한 그러했다. 1920년 3월 5일에 창간된 『조선일보(朝鮮日報)』, 4월 1일에 창간된 『동아일보(東亞日報)』, 그밖에 『중외일보(中外日報)』,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등은 모두 ‘한국’ 또는 ‘한’과는 무관한 제호를 선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광복운동이 한국의 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적 내포를 지닌 ‘광복운동’이었던 것에 비해, 공산주의적 목표에 있어서 그것은 역사발전의 잠정적 단계로서의 조선민족해방운동이었다. 후자는 웨스트팔리아적 의미의 광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혁명을 위한 민족연대의 의미가 컸다. 레닌이 제시한 교의는 식민지 문제 전반을 담당하던 코민테른 ‘동방부’의 공식입장이 되었고, 이는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일본과 조선에서는 민족운동이 고양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중략]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노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는 동시에 모든 민족 운동을 지도해야만 하며,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위하여 그 운동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프롤레타리아의 수가 적고 조직도 되어 있지도 않아서, 현 시

20) 임대식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중속적) 자본주의 노선은 ‘대한’과 불가불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임대식 1993, 39).

집에서는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단일하고 견고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면서 전 민족적인 사업을 수행해야만 하며,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위해 모든 민족그룹들을 통일시킨다는 목적으로 반드시 조선의 현재적 상황을 이용해야만 한다.²¹⁾ [밑줄 강조]

“계급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조선의 현재적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조선 혁명의 중요한 요소”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의 광복이라는 관점과 외면적으로 유사했지만, 궁극적 목표에 있어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공산주의의 경제결정론적 역사철학에 비추어 대한제국의 계기적 특성과 입헌군주국으로의 지향노력에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푸레(Furet 1988)에서 지적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경제적 토대에 기반 한 근대국가의 ‘계급적 성격’에만 집착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닌 국가권력의 헌정적 변화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을 대체했던 대한제국 대신 조선을 재호명하는 것은 일제 뿐만이 아니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추진된 임시정부의 명칭을 보면 한성정부의 ‘조선’, 천도교계열의 ‘대한민간정부’와 ‘조선민국 임시정부’, 이동휘와 안창호 주도의 ‘신한민국 정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으로서 ‘대한’과 ‘조선’이 상호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17년 이후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양자의 차별성이 뚜렷해지게 되었다(윤병석 2011, 30-32; 임대식 1993, 38-39).

대표적으로 코민테른의 직접적 지도를 받는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총독부 치하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없었던 사정과 맞물렸다. 1927년 2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한 민족단일당 성격의 신간회(新幹會)는 원래 그 명칭을 신한회(新韓會)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신한(新韓)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일제의 탄압이 심할 것은 물론 해산명령까지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한국’은 새 줄기(幹) 또는 새 뿌리를 길러야만 된다(新幹出古木)’는 의미를 담아 신간회라고 명명되었다. 신간회는 120개에서 150개에 달하는 지회와 민족협동전선의 기치하에 좌우의 세력으로 구성되어 최대 4만명에 달하는 회원규모를 가졌던 단체였다(조병욱 1986, 95-99). 공산주의자들이 신간회에 참여하면서 굳이 ‘조선’이라는 단체명칭을 고집하지 않은 이유는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고 보

21) “국제공산당 동양부 포르부르 제22차 의사록 (1923. 12. 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5: 국민대표회의 I』, 389.

여진다(임대식 1993, 41-42).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과 조선민족혁명당이 공존했다. 그러나 이 두 단체가 공존했던 사실을 단순히 “합일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양당은 지향점의 불일치는 물론, 실제의 공존과정에서도 정부 내 여야의 경쟁으로 볼 수 없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²²⁾ 그러한 차이는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국 이후의 결별로 이어졌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의 움직임에 대해 조소앙은 주중 미국대사 헐리(P. J. Hurley)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복하는데 실패하자 코리아의 공산주의자들 및 충칭의 동조자들은 자기네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코리아 내외에서의 사태에 호응할 목적으로 임정부로부터 탈퇴”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²³⁾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약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하고자 했던 김구는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창당했고, 1940년 5월 조소앙, 홍진(洪震), 지청천(池青天), 김학규(金學奎), 조완구(趙琬九), 김봉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재창당했다.²⁴⁾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발표하고, 한국의 “복국(復國)”과 “건

22) 1945년 8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손두환(孫斗煥) 등의 주도로 “국무위원의 총사직문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회의록 제39회(1945. 8),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4: 임시의정원 III』(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Hurley to Byrnes, Aug. 31, 1945, *FRUS* 1945 vol.VI, p. 1042.

23)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Byrnes),” 31 Aug. 194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 VI(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1042.

24) “임시정부가 이따금 위협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 한국독립당의 주요강령은 한국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독립당이 아니면 임시정부에 각료로 입각할 자격이 없었다(김구 2009, 549, 579).” 원조 한국독립당은 1930년 1월 상하이에서 창당되었다. 이 당은 1935년 7월의 조선민족혁명당 결성 당시 해체되었다.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에 참가했다가 재탈퇴한 조소앙 등에 의해 재건한국독립당이 결성되었다. 1940년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의 3당합당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이 되었다.

국(建國)을 위한 실행과제를 명시했다.²⁵⁾ 건국강령이 발표된 1941년 11월 이후 조소앙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당강해석 초안”은 한국의 복국과 건국이 의미하는 웨스트팔리아적 의미는 물론, 한국 국호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는 “완전광복”의 의미를 “영토권과 대인주권(對人主權)의 자유행사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계로나 외국 무력의 침점(侵占)상태로나 조금도 구속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데까지 우리 국가 영역 내에서 우리 국가의 행동을 자유로 할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²⁶⁾

조소앙은 또한 “고려”나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 국호가 되어야 하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일본의 강제병합 시에 “한국”이라는 용어를 일제가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인격”에 “사형을 집행”하고 “일개 지방”의 명칭으로 “조선”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이라는 국호는 명태조(明太祖)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호이기 때문에 “외교 압박”의 굴욕에도 못 미치는 “자동적 노예행위”를 개시한 “국치사(國恥史)”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셋째, 위만조선(衛滿朝鮮) 등의 예를 들며, “중국국민의 일부분”이 귀화하여 “반동(反動)”한 후에 “한” 대신에 “조선”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 “외국사서(外國史書)”에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용례가 “불명예”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이어야 하는 적극적 이유로서 조소앙은 다음과 이유들을 들었다. 첫째, 『삼국유사(三國遺事)』를 근거로 단국과 한국은 “역자(譯字)의 부동(不同)”으로서 “하나, 한울, 크다”의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삼한(三韓)”의 역사가 수세기 전 외국역사에 소개되었고,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영역으로서의 의미가 유지된 점이 중요하다. 셋째, 정유년(丁酉年, 1897)에 대한(大韓) 2자를 국호로 확정하고 열국과 평등교제를 개시하였음은 기간이 비록 불구(不久)하나 우리 민족의 국가적 인격을 표시한 명확한 사실이다. 의의에 있어서도 “한”은 대(大)의 의(意)에 일(一)의 의니 민족칭호나 국가칭호로 보아 가취(可取)할 점이 있다. 넷째, 기미년(己未年, 1919)에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즉시 건국원년을 단행하여 대한민국을 국호로 확정하게 된 것은 최초로 근대식 민주국가의 명실을 가지게 된 일이다.²⁷⁾

1943년 카이로에 모인 연합국 수뇌들, 즉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장개석은 “코리

25) “건국강령(1941. 11. 28),”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권: 임정편 II』.

26) “당강해석 초안(1941. 11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4: 한국독립당 II』, 117.

27) “당강해석 초안(1941. 11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4: 한국독립당 II』, 117-18.

아 인민의 노예상태(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를 “합당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해결한다고 명시했다.²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없었다면 연합국들은 코리아를 일본제국 내의 조선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합국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그 어떤 정체(polity)도 승인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던 주권의 국제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운동’을 주권 회복운동(광복운동)으로 생각했던 많은 한국/조선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연합국들은 ‘주인 없는 땅(No man’s land)²⁹⁾에서의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코리아문제를 인식했다.

IV.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분립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은 과거 국제사회가 베르사유평화조약에 삽입된 지도를 통해 인정했던 일본제국의 공간을 38선 기준으로 분할했다. 일본군대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해 설정된 이 선은 ‘38선 이북의 코리아+만주’와 ‘38선 이남의 코리아+일본제국의 본토’를 나누는 작전분계선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선은 대한제국 당시 근대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었던 주권공간의 분절을 초래했다. 결국 1948년 38선 이북과 이남에 사실상(de facto) 두 개의 국가가 분립(分立)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는 승전국들에 의한 분할점령에도 불구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했음과 비교하면, 일본제국의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권(作戰圈) 분할선으로서의 38선 획정이 곧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처럼 분할점령상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내부의 정치적 동력은 인민민주주의와 결합한 조선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결합한 한국민족주의로 분열되었다. “남대한-북조선(南大韓-北朝鮮)이란 용어(用語)가 점점(漸漸) 고정(固定)해 가면 고정(固定)해 갈수록 근심과 걱정은 심도(深度)를 더했던 것”으로, “세칭 보수적 우익측(世稱 保守的 右翼側)은 대한(大韓)이오, 자칭 진보적 좌익측(自稱 進步的 左翼側)은 조선(朝鮮)이오, 통칭 회색적 중간측(通稱 悔色的 中間側)은 고려(高麗)”라고

28) 카이로 선언(1943)의 원문은 예일대 아발론 프로젝트 사이트.

29) 이 표현은 미군정 법률고문관으로 활동했던 에른스트 프랑켈(Ernst Frankel)이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군정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사용한 것이다(Frankel 1948).

해석되기도 했다(설의식 n.d., 17-19).

광복 이전의 ‘조선’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치적 흐름은 1945년 8월 15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건준) 결성,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再建準備委員會) 결성, 9월 6일 건준의 비상조치로 소집된 인민대표대회에서 일방적으로 각료를 선출하여 발표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주석에는 이승만이 추대됨), 그리고 9월 11일 조선공산당 재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미군 군정청 공문서에서도 ‘Korea’를 대부분 ‘(남)조선’으로 번역했다. ‘남조선’은 ‘북위38° 이남의 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내 무역’은 ‘남조선 내의 무역을 의미’하며 ‘지역간 무역’이란 ‘남북 조선 간의(水陸空) 무역을 의미’했다(김혜수 1997, 105, 재인용).³⁰⁾

이미 소련군의 점령이 시작된 38선 이북지역에서는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이 들어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중동부 유럽에서의 상황과 유사하게 스탈린주의(Stalinism)가 적용되기 시작했다.³¹⁾ 당시 서울주재 소련 영사관 부영사 샤프신(Anatoli I. Shabshin, 본명 쿨리코프)의 아내 샤프쉬나(F. I. Shabshina, 본명 쿨리코바, Шабшина(Куликова) Фаня Исааковна)의 관점은 서울의 정치상황에 대한 소련공산당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인민들의 독립지향, 자신들의 정부를 갖고자 하는 인민들의 고양된 민족감정과 열정”을 “악용”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에는 “방향을 잃은 진실한 애국자들,” ““한국정부”라는 바로 그 명칭”에 기반된 “정직한 이들”도 있다고 보았다(Shabshina 1996, 127-128). 이것이 당시 한국이 아니라 ‘조선’을 지지했던 소련 공산주의자의 관점이었다.

조선공산당의 일반적 인식, 좌익계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38선 이북에서 일관되게 조선이라는 명칭을 고수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6년 2월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사실상의 정부기구였다. 이 기구는 1947년 2월 외무국의 신설로 “대외적으로도” 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북조선인민위원회(北朝鮮人民委員會)로 개칭되었다.

30) 『미군정청관보』 제1권, 341 및 제3권, 258-60.

31) 스탈린주의의 이론과 38선 이북의 정치상황 변화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Ree(1989). 조선공산당은 1946년 스탈린의 좌익정당 합당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 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이 합쳐져 북조선노동당(北朝鮮勞動黨)과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외무국이 신설된 것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대외적으로도 실질적 정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서동만 2005, 191).

1948년 2월 7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초안이 제출되었고, 2월 10일에는 “조선임시헌법초안”이 발표되었다. 김일성(金日成)은 1948년 3월 27일에서 30일까지 개최된 북조선노동당(北朝鮮勞動黨) 제2차 대회에서 국제정세를 “민주세력과 반동세력”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국제반동세력의 선두에 선 제국주의 세력,” 소련을 “국제민주력량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자 “주동적 역량”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당시 세계의 이념적 대립이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에서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이 발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1947년 9월 공산당정보국(Cominform)의 창설에 이어 즈다노프(Andrei Zhdanov)의 “두 개의 진영(Two Camps)” 연설이 발표되었다(Zhdanov 1947).

김일성은 헌법초안에 대해 “북조선 인민들이 해방 이후 두 해 동안 걸어온 길과 그들이 전취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총화, 확보하여, 전조선 인민들에게 우리 조국의 나갈 길을 가리켜주는 역사적 문건”이며, 인민위원회 정권에 대해서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의 소위 ‘의회적 민주주의’ 정권형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정권형태”라고 주장했다(서동만 2005, 210).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귀결된 이 흐름은 일관되게 ‘조선’을 고수했다.

한편,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익진영’의 축을 형성하게 되는 세력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봉대를 주장한 한국민주당,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론을 유지한 한국독립당이였다. 1945년 9월 16일 결성된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과 11월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한국’이라는 호명을 고수하면서 ‘조선’이라는 호명과 대치했다. 이들은 귀국 직후 조선인민공화국에 맞서 독립의 첫 단계는 일정한 국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익희 내무부장 명의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³²⁾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도 귀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립될 국가의 명칭을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내외에 선포하였기 때문”

32) 『서울신문』, 1945년 12월 8일.

이라고 답변했다.³³⁾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태극기는 대한의 국기요, 애국가는 대한의 애국가”임이 선포되었다(김혜수 1997, 95, 재인용).³⁴⁾ 민주위원의 추천으로 3·1운동 기념일을 경축일로 정한 법령 제2호에서 ‘Korean’은 ‘대한민족’으로 번역되어 공포되었다(김혜수 1997, 105-106, 재인용).³⁵⁾

코리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이 결렬되고, 1947년 9월 17일 코리아문제는 국제연합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 11월 14일 국제연합 총회는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국제연합코리아임시위원단(UNTCOK,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언트콕)의 입북을 거부했다. 당시 이 위원단의 명칭은 38선 이북은 물론 38선 이남에서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아니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으로 번역되고 있었다.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 소총회는 선거가능지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이미 1948년 1월 12일부터 활동하고 있던 국제연합 코리아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38선 이남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사에서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은 헌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향후 세워질 정부가 1919년에 세워진 “대한독립민주국”이며 “한국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라고 선언했다(우남실록편찬위원회 1976, 541). 이후 헌법제정 과정에서 김성수(金性洙)와 한국민주당 인사들이 ‘고려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것(이선민 2013, 27-33)은 국제적으로 ‘코리아’라는 명칭이 가진 장점, 자주적 고대국가였다고 인식된 고구려에 대한 애착, ‘대한’ 국호를 일반민중이 생소

33) 『매일신보』, 1945년 10월 17일.

34) 이혁, 『애국빼라전집』 제1집(조국문화사, 1946), 93-94.

35) 『미군정청관보』 제1권, 744. 1946년 7월 조선민족이 어떠한 정부를 요망하는지에 대해서 군정청에서 전례없이 서울과 지방에서 8,453명(우익 2,370명, 좌익 1,464명, 중립 4,619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189명(14%)이 자본주의를, 6,037명(70%)이 사회주의를 원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적 차이는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당별 지지도에서 한독당과 인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고, 한민당은 중간정도, 공산당이 가장 낮았던 것에서도 반증된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495명 중 604명(24%)이 대한민국을, 1,708명(70%)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BK, 1946년 7월 29일(No.7), 8월 19일(No.12), 이승만문서, No.2104-2105, No.2100; 『조선일보』 1947년 7월 6일.

하게 여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관념에 내포된 웨스트팔리아적 국제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다.³⁶⁾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에 승복했다.

1948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국회 제18, 19, 20차 본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에 대한 설명과 이의제기가 이어졌다.³⁷⁾ 그러자 이승만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기본정신을 임정 정신에 두기로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관철시켰다. 이로써 헌법초안에는 없던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포하였음”이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³⁸⁾

38선 이남에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관념의 분화가 일반대중적 차원에서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월 이범석 국무총리가 발표했던 국무원고시 제7호에 의해서였다. 이 국무원 고시는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³⁹⁾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은 광무황제 스스

36) 설의식(薛義植)은 1946년 7월에 『동아일보』 지상에 연재한 논설들을 통해서 새 나라의 국호는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새한’을 지지했다. 설의식은 자신이 제시한 ‘새한’의 ‘한’이 대한에서 말하는 ‘한’의 음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임대식 1993, 44, 49).

37) 『국회속기록』, 1권, 1948년 6월 26일, 제18차본회의, 224; 『국회속기록』, 1권, 1948년 6월 28일, 제19차 본회의, 274; 『국회속기록』, 1권, 1948년 6월 29일, 제20차 본회의, 284.

38) 이승만의 제의는 제3독회에서 윤치영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국회속기록』, 1권, 1948년 7월 7일, 제27차 본회의, 503. 아울러 외국인들이 우리를 ‘고려(Korea)’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국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공문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결의되었다. 『국회속기록』, 1권, 1948년 7월 1일, 제22차 본회의, 337.

39)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런던올림픽에 파견되었던 선수단 깃발은 ‘조선올림픽대표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범석이 발표한 국무원고시에 따라 『조선일보』라는 제호도 위험에 빠졌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전시내각의 공보처장에 임명된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은 “『조선일보』의 ‘조선’이라는 제호는 북이 쓰는 국호이니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일제 때부터 사용한 고유명사인데 ‘조선’이면 어쩔고 ‘한국’이면 어쩌냐”고 말해 『조선일보』라는 신문제호는 살아남게 되었다(이선민 2013, 45-46).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김활란 공보처장의 주장을 따랐다면 『조선일보』는 『한국일보』로 제호를 바꾸어야 했을 것이고, 1954년 장기영이 『태양일보』를 인수하여 창간한 『한국일보』는 다른 제호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마한, 진한, 변한을 계승한다고 했던 대한제국,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 국제적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용어였다(양승태 2010; 김명섭 2011b). 이에 따라 조선반도 대신 한반도, 동조선만(灣) 대신 동한만과 같은 용어들이 38선 이남에서 보편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의 샤흐요궁(Palais de Chaillot)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 총회결의문 제9항의 권고대로 한국에 대한 각 국가들의 승인이 이어졌다. 1949년 미국, 중화민국, 영국, 프랑스 등이 대한민국을 승인함으로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The Security Council of UN) 상임이사국 가운데 소련을 제외한 4개국이 총회의 결의를 따랐다. 1950년 3월까지 바티칸(1949년 4월 13일), 네덜란드(1949년 7월 25일), 그리스(1949년 8월 4일), 벨기에(1949년 8월 15일), 룩셈부르크(1949년 8월 29일), 아이슬란드(1950년 2월 12일) 등을 비롯해서 26개국이 한국을 승인했다(김영호 2014, 3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한 평양정권은 국제연합의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지정학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소련,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긴밀한 국제관계를 수립했다. 1948년 9월 9일 38선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의 국가체제가 수립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단군조선이 세웠다는 조선,⁴⁰⁾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 그리고 한일강제병합기의 조선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정통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승한다는 조선민족주의적 관념이 인민민주주의 관념과 결합하여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조선과 한국의 관념적 분화는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 조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 민단)으로의 분화로도 이어졌다. 후자는 1945년 도쿄(東京)에서 성립된 재일조선인련맹(조련: 在日朝鮮人聯盟)에서 공산주의노선에 반발하여 나온 신조선건설촉진청년동맹(新朝鮮建設促進青年同盟, 건청)과 신조선건설동맹(新朝鮮建設同盟, 건동)이 중심이 되어 1946년 10월 3일에 발족된 재일본조선거류민단(在日本朝鮮居留民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40) 한자(漢字)의 전래시기를 고려할 때, 단군이 나라를 만들 당시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조선(朝鮮)은 나중에 한자로 표기된 이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의식은 『조선말 큰사전』이나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이름에 ‘조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다(설의식 n.d., 89-94). 조선어학회는 나중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김명섭·오가타 2007, 258).

이렇게 볼 때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수립은 인민민주주의와 결합한 조선민족주의적 지향 대 민주주의와 결합한 한국민족주의적 지향 간의 대치를 토대로 한 ‘분립(分立)’이었다. ‘조선’과 ‘한국’만큼,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국’에 담겨 있는 의미의 대립도 분명했다. 전자가 공산주의 혁명단계론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을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했다면, 후자는 군주정이나 귀족정에 맞서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주권행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V. 결론

1897년 대한국을 선포한 광무황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명칭변화는 청제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적 독립을 추구했던 노력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국에서 조선으로의 강제적 개칭(改稱)이 이루어졌다. 이에 맞서 1917년 대동단결선언은 민국으로서 “신한국”의 존속을 천명했고, 1919년 4월 상하이 프랑스로계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되 ‘대한’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광복운동의 목표는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동시에 그 내포를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혁명정부를 전복시킨 볼셰비키의 집권을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공산주의의 영향과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 되었던 베르사유평화체제에 대해 가졌던 환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조선공산당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공산주의자들은 한국 보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한국독립당과 대립했던 조선민족혁명당도 한국의 광복이 아닌 ‘오천 년’간 이어진 조선민족의 회복을 주장했다. 조선이란 명칭은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역사적 진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공산주의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응축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국과 건국을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천명했고, 조소앙은 이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하려고 했던 한국민주당, 김구, 조소앙, 신익

희 등의 한국독립당, 1919년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확신했던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 중앙협의회 등의 정치세력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주축이 되었다. 1948년 하나의 원형적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실상(de facto) 두 개의 국가가 분립함으로써 조선과 한국의 관념적 분화는 확고해졌다. 38선 이북에는 ‘조선’이라는 관념과 인민민주주의가 결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선 이남에는 ‘한국’이라는 관념과 민주주의가 결합한 대한민국이 각각 수립된 것이다.

1948년 이후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관념은 국가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재생산되었다. 조선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남조선,’ 한국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북한’이라고 호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따라서 똑같이 민족통일을 말할 경우에도 각각 조선민족⁴¹⁾의 통일과 한국민족의 통일을 동상이몽(同床異夢)하게 되었고, 자기중심적 흡수통일을 허망(虛望)하게 되었다. 상호존중을 말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호명하는 것,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의 포악성에 대한 보편윤리적 비판의식은 당연한 것이지만, 조선과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관념의 분화과정이 보여주는 ‘서로 다름’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보다 냉철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6년 1월 5일

심사일: 2016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9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및 이승만연구원 소장 문서.

예일대 아발론 프로젝트. <http://avalon.law.yale.edu>(검색일: 2014. 11. 11).

41)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창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김정일의 주도로 ‘김일성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김일성민족’이야말로 봉건적 ‘조선민족’이 근대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이다. 1997년에는 조선어(한글)를 ‘김일성민족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1949*.

『고종실록』

『국회속기록』, 1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5, 34권.

『미군정청관보』, 1, 3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1권.

『통감부문서』, 6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 3권.

『매일신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고정후.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구. 2009. 배경식 풀고 보탬.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 서울: 너머북스.

김명기. 2008. 『대한제국과 국제인도법』. 서울: 책과 사람들.

김명섭·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2007.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통합적 명명을 위한 기초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3호, 257-280.

김명섭. 2011a. “한국 현대사 인식의 새로운 ‘진보’를 위한 성찰: 세계사적 맥락화와 ‘반반공’주의의 극복.” 『한국현대사학회 창립학술회의 자료집』.

김명섭. 2011b. “대한제국의 역사적 중점에 관한 재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집 2호, 5-30.

김명섭. 2015. “한국의 국제적 탄생과 성장.”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 70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김소영. 2009. “대한제국기 ‘국민’형성론과 통합론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영호. 2014. “대한민국 정부 승인과 외교 기반 구축.” 김용직 편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가체제 구축』.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진성. 1909. “입헌세계.” 『대한홍학보』 4호 (6월).

김학준. 2008. 『북한의 역사 2: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1948년 9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혜수. 1997. “해방 후 통일국가수립운동과 국가상징의 제정과정: 國號·國旗·國歌·國慶日 제정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5輯, 95-126.

-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서울: 돌베개.
- 백동현. 2009. 『대한제국기 민족담론과 국가구상』.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 설의식. n.d. 『國號論議』. 서울: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1948년 10월 이후].
- 송호근. 2012.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민음사.
- 송호근. 2013.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서울: 민음사.
- 양승태. 2010.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우남실록편찬위원회 편. 1976. 『우남실록』. 서울: 열화당.
- 유영익·송병기·이명래·오영섭 편. 2009. 『이승만 동문 서한집(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대원. 2011. 『테라우치 마사다케통감의 강제병합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서울: 소명출판.
- 윤병석. 2011. 『대한과 조선의 위상』. 서울: 선인.
- 이선민. 2013.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임대식. 1993. “일제시기·해방후 나라이름에 반영된 좌우갈등: 우 ‘대한’·좌 ‘조선’과 남 ‘대한’·북 ‘조선’의 대립과 통일.” 『역사비평』 23호 (여름), 35-50.
- 임상석. 2010. “조선학/한국학의 통국가적 구성: 1910년대, 국역의 양상과 한문고전의 형성: 최남선의 출판 활동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8권, 63-88.
- 조병옥. 1986. 『나의 회고록』. 서울: 해동.
- 차배근·오진환·정진석·이광재·임준수·신인섭. 2001.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황태연. 2015.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과 의미.” 『정치사상연구』, 21집 1호, 35-87.
- Chauprade, Aymeric. 2003. *Géopolitique: Constantes et Changements dans l'histoire*. Paris: Ellipses.
- Degras, Jane ed. *The Communist International Documents 1(1919-1922)*.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Flint, Colin. 2007. *Introduction to Geopolitics*.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길.
- Frankel, Ernst. 1948.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rinted in *Journal of Modern Korean Studies* 2 December, 1985, 69-80.
- Furet, François. 1988. *Deborah Kan Furet trans., Marx and the French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m, Myongsob. 2014. “Why No Westphalian Peace Order after the Hideyoshi War in Korea (1592-98)?” *Korea Observer* 45. No. 1, 117-152.

- Manela, Erez. 2007.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e, Erik van. 1989.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 Robinson, Michael Edson. 1988.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aussure, Ferdinand de. 198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bshina, Fanya Isaakovna(샤브쉬나, 파냐 이사악꼬브나). 1996. 김명호 역. 『1945년 남한에서』. 서울: 한울.
- Yack, Bernard. 2012. *Nationalism and the Moral Psychology of Commu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hdanov, Andrei. 1947. "Repor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e Founding Conference of the Communist Information Bureau in Poland, Sep. 1947." In Robert V. Daniels 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1960.

ABSTRACT

Joseon and Hanguk:
Geopolitical Constancy and Differentiation
of Two Ideas of Korea

Myongsob Kim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geopolitical constancy and differentiation of two ideas of Korea, Joseon and Hanguk, dating back to 1897 when the Great Han Empire (Dehanjeguk, Hanguk) was declared by the 26th King of Joseon, Gojong. The idea of Joseon was revived by Japan in 1910 when the country annexed the Great Han Empire (Dehanjeguk) by forc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Dehanminguk (Hanguk) was established in 1919 in the Shanghai French Concession. Since 1917, the Bolshevik's seizure of power increase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Joseon was preferred over Hanguk by Korean communists. This differentiation of geopolitical ideas continued until 1948 when two different *de facto* states were established above and below the 38th parallel, i.e. Joseon Minjujui Inmin Gongwhagu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Dehanminguk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Joseon, Hanguk, Korea, idea of nation, Geopolitics